

2020 유민펠로우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Geneva Academy: Th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 장 현

目 次

- I. 序: Geneva Academy 국제강좌 참석 동기
- II. Geneva Academy 및 수강 강좌 개괄
 - 1. Geneva Academy 일반
 - 2. Th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강좌 일반
- III. 강좌 내용 소개
 - 1. ICC의 기본 구조 및 작동 방식
 - 2. ICC 작동 과정에서의 구체적 제문제
- IV. 국제기구 심장부로서의 Geneva: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 V. 마치며

I. 序: Geneva Academy 국제강좌 참석 동기

“한국의 공교육은 아이들을 성장시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가, 혹은 아동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가?”

— R. Winter, UN아동권리위원회(UN CRC) 위원장의 대한민국 CRC 심의 당시 발언 中

제네바에서 수강한 국제형사법 강좌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용문이지만, 2019년 9월 UN CRC 심의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들었던 Winter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야말로 국제법을 통한 지역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직접 실감할 수 있었던 기회이자 Geneva Academy 참석의 주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NGO 산하 연구소에서 활동해 오며 오랜 시간 동안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해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처럼 우리나라 교육제도 아래에서 아동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통렬한 문제의식을 느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유민펠로우 사업에 지원할 때에도 언급하였듯, 이처럼 해당 심의(Session)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과정에서, 국내적 이슈에 국제적 시각과 의견이

투입되는 과정이야말로 분야를 막론하여 법과 제도적인 담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제법을 통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목격한 이래 CRC의 수준을 넘어 기타 국제협약과 기구에 대한 공부를 부족하나마 스스로 이어나가던 과정에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던 형사법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이에 대한 국제적 지식을 심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부 재학 시절 UN CRC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를 융합하여 논문을 작성하며 형사 절차와 국제조약의 접목 가능성을 목격한 바가 있었기에, 이러한 열망은 더욱 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의 흐름 속에서 형사법 분야야말로 가장 취약(Vulnerable)한 국제법의 영역일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인권·무역·민사 등의 분야와 관련된 국제법과 제도의 발전 속도에 비하여 국제형사제도라는 개념의 등장이 훨씬 늦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기반이었습니다. 본래 공권력으로서 집행되는 국가의 형벌권은 국민국가(nation-state)의 등장 이후,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고히 갖춘 문명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으로서 인식되었다고 해석하는 일부 정치학자들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 자체로서 특권의 분할이 될 수밖에 없는 국제형사제도에 대해서는 그 존립 가능성에 대하여 무한히 안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형사상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대한 소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도 이러한 형사법의 본래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잡다단해지는 국제사회의 모습 속에서 적어도 세계시민들이 UN이라는 최소한의 자유주의 체계만큼은 지켜나가고자 한다면, 험난한 여건 속에서도 국제형사법 발전 가능성의 유지(維持)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간 경계가 끊임없이 모호해져 감에 따라,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는 중대범죄의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처음에는 아동권리 및 그에 관련된 국제법 영역에서 출발한 관심이 점차 그 주변의 아젠다까지 확장되면서, 최종적으로는 Geneva Academy의 “Th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강좌에 참석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닿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하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해당 강좌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제형사제도의 특징과 더불어 현 상황에서의 ‘한계’를 끊임없는 참석자 간 토론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에 대한 열망은, 유민펠로우 지원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II. Geneva Academy 및 수강 강좌 개괄

1. Geneva Academy 일반

Geneva Academy는 제네바대학교 법학부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서, Armed Conflict · Protracted Violence · Human rights 등의 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UN 제네바본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강생이 UN 등의 국제기구나 관련 NGO 등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업무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세부적인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기에,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정도의 깊은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석한 강좌에서 다른 내용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이전에, 본 보고서가 앞으로 Geneva Academy에 참석하게 될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석 이전까지의 준비 및 정착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민펠로우 지원사업을 통해 단기강좌를 수강하시게 되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Academy “Short Course” 프로그램에 참석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강좌는 3주에서 5주 정도의 수업 기간 동안 주2~3회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제네바대학교의 본 캠퍼스가 아닌 Academy 별도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제네바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Lake Geneva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멋진 건물입니다.



Geneva Academy 강의실 외관

강좌 Apply 시에는 A4 한 장 분량의 지원동기서(motivation letter)와 CV 및 어학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강좌를 수강하는 대부분의 인원이 현지 법조·외교·관·시민사회계 등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제출 서류에서도 법학에 대한 background와 함께 관련 경력을 함께 서술하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 법학과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정도의 학적이 존재

한다면 Accept가 되지 않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좌 Accept를 받게 된 이후에는, 체류기간 동안의 Housing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네바는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는 지역적 특성상, 단기 체류가 가능한 숙소를 구하려는 수요가 공급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제네바 시내에서 형성되는 Housing 가격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강좌 Accept 이후에 Geneva Academy 측에 숙소 관련 문의를 하면, 학교 측에서 Arrange가 가능한 제네바 대학교 측의 학생(Guest) 숙소를 추천해 주기도 하지만, 학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 비용이 최소 10만원 이상 소요되는 가격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안을 찾아보던 중, 스위스 국경을 넘어 존재하는 프랑스 마을인 Ferney-Voltaire, Saint-Julien-en-Genevois, Annemasse 등의 지역에서 통근·통학하는 인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 지역 중 고민 끝에, ‘Saint-Julien-en-Genevois’ 지역에 위치한 에어비앤비에서 3주간 머물렀습니다. 제네바 시내에 위치한 같은 조건의 숙소들 대비 20%정도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근교 프랑스 마을들이 모두 대중교통으로 3-40분 여밖에 소요되지 않고, 교통권 시스템 역시 공유되는 만큼, 프랑스 지역의 Housing을 알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2. Th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강좌 일반

Armed Conflict의 영역이 Geneva Academy의 주된 연구 분야라는 점이야말로 해당 강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한, 여타 국제형사법 관련 강좌들과는 다르게,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보다 현 제도의 “Challenge”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진다는 점도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목격한 실제 수업 현장 역시 교수자가 그 날 다룰 주제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하면, 수강생들이 읽어 온 Reading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의 주제와 수업 방식 모두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수업을 맡았던 Paola Gaeta 교수는 이탈리아 외교위원회 및 유명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이사회의 구성원으로도 활동중인, 실력 있는 국제형사법계의 전문가였습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근무하며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도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총 5회 진행된 세미나는 각각 1)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ICC jurisdiction 2) Referrals and Deferrals 3) Complementarity 4) Opening an investigation at the ICC 5) Cooperation and Immunities 라는 주제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케이스 · 로힝야 케이스 · 요르단 케이스 등의 실제 사례를 접목해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각 수업에는 3개에서 7개 사이의 Reading 자료가 주어졌기에, 현장에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자료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특성상 사전 Reading 내용을 숙지해야만 원활한 토론 참여가 가능했기에, 주어진 내용을 빠짐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하에서는 강좌에서 조명한 ICC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토론 과정 중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III. 강좌 내용 소개

1. ICC의 기본 구조 및 작동 방식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발효되어 상설 ICC 시대를 개막하기 전까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경우와 달리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각국의 국내법원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는 형사문제에 관하여 통일적인 처벌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각국의 보호법익을 침해당한 국가에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연수원, 국제형사법, 2015). 특히 앞서 서론에서 국제정치학적 요인을 파악하였듯이, 테러, 전쟁, 침략범죄의 경우 그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그国籍국이나 소재지국이 적극적인 처벌의지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벌의 확보를 암살이나 납치 등에 의하기보다는 ICC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촉발된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 각국은 집단 살해,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철저한 처벌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이에, 승전국(勝戰國)간의 협정으로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각각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1993년과 1994년에도 각각 유고슬라비아 사태 및 르완다 사태와 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의결으로 한시기구인 구 유고슬라비아 미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쳐, 드디어 98년에 ICC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法源으로서 작용되는 로마협약(the Rome Statue of the ICC. 이하 RS)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2003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CC가 출범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설 국제형사재판기관이 설립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명칭은 ‘국제형사재판소’이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연한 원칙으로서 합의관할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RS규정은 당사국에게만 적용될 뿐이며, 비당사국은 관할권을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의 대상이 되는 범죄 또한 RS상의 명문규정을 통해 네 가지의 핵심 범죄로서 제한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집단살해(Genocide. RS 제6조):**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범죄. (‘의도’와 ‘금지된 행위’가 구성요건입니다. 우리의 형법학 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집단살해 규정이 “가중된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2)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RS 제7조):** 민간인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행위. 살인, 절멸, 노예화, 거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전,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박탈행위,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기타 성폭력, 집단에 대한 박해행위, 실종, 아파르트헤이트 및 기타 고의적인 비인도적 행위.
- 3) **전쟁범죄(War Crimes. RS 제8조):** 국제적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법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법의 위반행위. 단, 전쟁범죄는 가입국이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 동 국가 가입 후 7년간 관할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경과 후에는 제한 없이 관할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4) **침략범죄:** RS 상에는 관할 대상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범죄의 정의규정 및 관할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한 당사국 간 추후 합의 시까지 일단 관할권 행사를 유보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관할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ICC 재판에 있어서는 이하의 원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 1) **보충성원칙:** ICC의 판결은 국내 법원의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합니다. (근거규정: RS 제1조 및 제17조) 특히 17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ICC가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 2) **중대한 범죄의 원칙:** ICC는 국제사회 전체에 관심이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만을 다루게 됩니다.
- 3) **국제관습의 원칙:** RS규정은 가능한 한 국제관습법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한 원칙입니다.
- 4) **합의관할원칙:** 앞서 언급하였듯이, RS규정은 당사국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게는 법원이 관할권을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5) **개인적 형사책임원칙:** 피의자·피고인이 국가수반이라거나, 공적 지위에서 행한 행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2. ICC 작동 과정에서의 구체적 제문제

‘Ⅲ-1’에서 검토한 ICC의 기본 구조와 작동 방식은 매 수업시간 서두에서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된 ICC의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좌에서는 RS상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국제형사절차를 실제 case와 연결시키며,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하였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면에 한계가 있기에 수업에서 다룬 모든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가장 많은 격론이 있었던 두 가지 주제를 소개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ICC 역시 형사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검찰권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ICC의 검찰부는 각국에서 수사 자격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선출)됩니다. 검찰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당사국이 ICC에 situation¹⁾을 회부하거나, 안보리가 이를 회부하거나, 혹은 검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지간에, 결국 처벌을 향한 검찰권 행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검찰관이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었듯이, 이처럼 검사가 포괄적이고 유일한 기소권한(refer to the Prosecutor a situation: RS 제 14조)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최근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볼 때에, 더욱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콜롬비아, 칠레, 파라과이 등 6개국이 베네수엘라 case를 ICC에 회부하였으나, 검찰부에서는 조사 이후 제소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소독점의 원리를 국내적 시각으로만 파악하여, 기소독점 여부의 결정은 입법자의 판단일 뿐이라고만 결론지으면 더 이상의 반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UN체제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체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제소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차 당사국이 외부화(externalise)되는 것이 옳기만 한 것이냐는 논란은 남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논쟁의 여지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안보리)와 ICC간의 관계입니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안보리는 사건(situation) 회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회부한 사건에 있어서 ICC의 관할권 행사는 1년간 유보가 가능하며, 유보요구의 갱신도 가능합니다(RS 제16조). 이 규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Resolution 1422’ Case (UN평화유지군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이기도 합니다. 해당 resolution에서도 드러나듯이, RS상의 문언상 안보리가 회부할 수 있는 대상은 특정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situation’이기에, 안보리는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者가 어떠한 국가의 nationale이든지 아닌지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즉, 안보리는 자신들의 강력한 권한을 ICC라는 사법적 영역으로까지 미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안보리의 영향력 행사는 RS 제16조를 검토할 때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안보리가 ICC를 ‘block’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일반적으로 국내에서의 형사절차상 고소는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여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ICC규정은 ‘situation’을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게 인정되는 veto권을 상기한다면, 결국 미국 · 영국 · 중국 · 프랑스 · 러시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리적 관점과는 하등의 관계 없이- ICC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적용사례: resolution 1593).

이러한 문제는 다시금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문제와 연관되며,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국제법의 미묘한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처럼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정의의 과정에서 외부화(externalise)되지만, 상임이사국은 철저히 내부화(internalise)되는 (심지어 미국은 RS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Judical Justice'라는 가치가 국제질서 속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정치 및 이념의 문제와 맞닿을 수밖에 없기에, 강의 현장에서도 뚜렷한 해답을 도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강생의 국적이 다양한데다 외교관 신분도 여럿 있었기에, 강좌 말미에는 어쩔 수 없이 자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발언 내용이 결정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는 자체야말로 진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라 생각합니다. 아직 RS상에 '침략범죄'의 명쾌한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듯이, ICC 체제는 아직도 수많은 발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에, 이러한 작금의 한계에 좌절하며 발전 가능성을 묵과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 믿습니다.

IV. 국제기구 심장부로서의 Geneva: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Geneva Academy의 강의 이외에도, Geneva는 그 자체로서 국제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특히 저로서는 2019년 두 번의 Geneva 출장 경험을 통해 부족하나마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UN CRC 심의 과정에서 인연을 쌓은 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제네바대학교 교수였기에, 연수 기간 중 그분들과 개별적인 일정을 잡은 뒤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형사법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다시 제네바에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한 위원께서는 CRC와 RS를 연계하여 아동에게 교육하는 국제법 강좌를 컨소시엄 형태로 기획해보자는 꽤나 실제적인 제안 역시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내년은 우리나라가 UN CRC를 비준한지 3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한 만큼, 제가 활동해 왔던 분야와 공부하고 있는 영역을 융합하여 소속 연구소에서의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Palais Wilson B/D Meeting 당시

더불어, 외교 및 법학계 현직자 수강생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Geneva Academy 강좌의 특성상, 그러한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국제기구 내부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로스쿨 졸업 이후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근무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는 저로서는,

현재 각 기구의 legal part에서 P/D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료 수강생들의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현실적인 안내를 친근한 분위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국제도시로서의 제네바가 제공해줄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믿습니다.

V. 마치며

작년 이맘때 설레는 마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평소 관심을 갖고 미약하나마 혼자서 공부해오던 국제법 영역과는 3년의 시간 동안 이별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3년 동안 치열한



내신 경쟁과 변호사시험 합격을 향해 달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주된 수험 과목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국제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자로 된 법전에 익숙해지기에 부족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영어로 된 텍스트와 마주할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

강좌 수료중

다. 그러나,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 제공해주신 '유민펠로우'라는 기회는 법학이

라는 방대한 틀 내에서 구체적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나아가, 일률적으로 생각되기 마련이던 법조직역에서의 미래 역시 보다 새로이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시스템을 끊임없이 조화시키면서 국제법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UN은, 세계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법률가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제강좌 파견을 발판 삼아, 더욱 더 목표를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